말로만 하던 영호남 화합, 달라지고 있다

DJ 남긴 '화해와 용서' 화두 상생으로 실천
민추협 부산민주화공원, 5·18 묘지 함께 참배
광주-대구 영호남 철도건설 등 현안 협력 가속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광주·전남과 대구, 부산이 망국적인 지역갈등을 끝내기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지역현안을 공동 추진키로 하는 등 영호남 간 화해와 화합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김 전 대통령이 남긴 '화해와 용서'의 화두를 '상생(相生)을 통한 동서화합'으로 풀어냄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84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주도해 만든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회원들은 이른 시일 내에 부산 민주화공원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추협 회장인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DJ서거를 계기로 DJ와 YS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지역감정의 벽이 허물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련됐다"며 "영호남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모교인 목포상고(현 전남제일고) 총동문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교인 부산상고 교정에는 김 전 대통령의 동상을, 그리고 목포상고 교정에는 노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와 영호남 화합에 헌신한 두 대통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자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는 동문들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김영수(55) 목포상고 총동문회장은 "동문회 일각에서 이런 의견이 있어 부산상고 동문회 측과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협의해볼 생각"이라면서 "민주주의와 지역주의 극복에 앞장선 선배를 잃고 슬픔에 잠긴 양쪽 동문이 힘을 합쳐 영호남 화합의 '선봉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영·호남 지자체 간 공동발전· 화합을 위한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달 27일 의료산업 분야 윈-윈을 위한 공동 협력을 추진하는 의료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속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조만간 이 협약에 따라 양 지역 의료연구개발 기관 간 교류 협력과 지역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 발굴 등에 나설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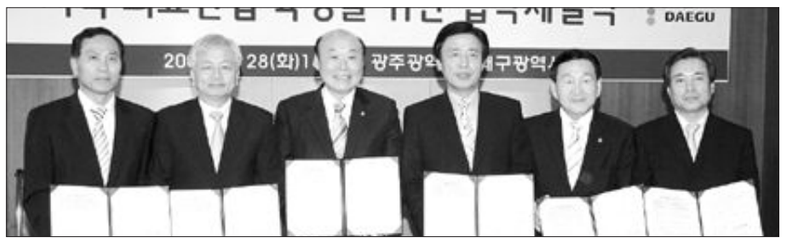
또 양 도시는 첨단복합단지의 입지가 어느 곳이 되더라도 의료 연구개발 공동 추진, 연구 시설·장비 공동 활용 사업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대구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따른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는 최근 광산업, 디지털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대구·경북은 IT, 신소재 산업 분야에서 강점이 있어 두 지역이 의료산업을 중심으로 협력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광주시 측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국회 영·호남 화합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남 출신 정의화 의원에게 2015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위원장을 맡겨 대회 유치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밖에 광주시와 대구시는 최근 양 지역을 잇는 영호남 철도 건설 공동 촉구와, 대전을 포함한 내륙첨단과학 벨트 구축 등 경제 발전과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역 화합을 주창해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영·호남 지자체간 교류 협력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광주시와 대구시의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협약 체결식. 〈광주시 제공〉

봉하마을 분향소

20일 오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회관 앞 광장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설치돼 방문객들이 참배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설치된 곳은 바로 3개월 전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설치됐던 곳이다. 연합뉴스

YS 상도동집에 조기게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동지이자 경쟁자로 DJ병문안에서 화해했던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상도동 자택에 조기가 내걸렸다.〈사진〉

DJ의 장례가 국장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YS는 지난 20일 여느 때와 같이 오전 7시께 아침운동차 자택을 나서며 비서진에게 "국장으로 결정됐으니 조기를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때부터 YS의 상도동 자택 대문에는 DJ의 서거를 애도하는 조기가 걸리게 됐다. 근방에 조기가 내걸린 집은 YS의 자택이 유일하다고 한다.

현행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에 따르면 장례의식이 국장으로 치러질 경우 국장기간에는 조기를 게양하도록 돼있다.

상도동 관계자는 "상도동 자택의 조기는 영결식이 개최되는 23일까지 게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YS는 국장 기간 불필요한 약속을 가급적 뒤로 미루며, 오랜 동지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DJ와 '병상 화해'를 한 YS가 화합을 실천하기 위한 움직임에 적극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연합뉴스

대구·부산도 추모객 급증

DJ 영상물 거리 상영·퍼포먼스 등 잇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닷새째이자 주말인 22일 대구와 부산 등 영남지역에서도 곳곳에 마련된 분향소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추모제와 공연이 잇따라 열리는 등 김 전 대통령 추모 열기가 고조됐다.

대구 2·28 기념공원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지난 21일 하루에만 2천200명이 찾았고, 22일에도 3천여 명이 분향을 마치는 등 시간이 갈수록 조문객이 늘었다.

경남 창원의 경남도청 주차장과 통영시청,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봉화산 정토원 등 모두 19곳에 설치된 김 전 대통령의 분향소에도 아침부터 조문객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도내 분향소에는 22일 오후까지 도청 2천여 명을 비롯해 모두 7천여 명의 조문객이 찾은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또 부산시청 광장과 부산역 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시민들이 몰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전국에서 관광버스 등을 타고 온 조문객들이 몰려 김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었고, 두 전직 대통령의 영정이 나란히 있는 봉화산 정토원에도 조문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

영결식을 하루 앞두고 이들 지역에서도 추모제와 추모공연이 동시 다발적으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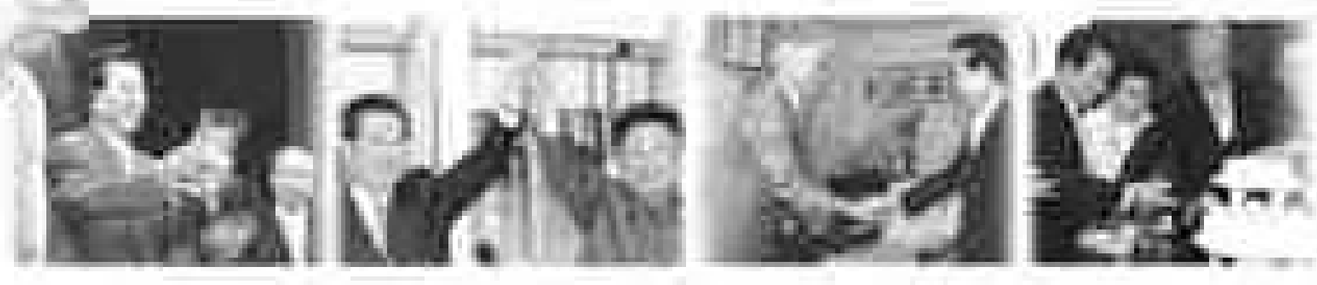
이날 오후 7시 부산역 광장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와 민주당 부산시당이 주최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추모문화제에서는 홍모 영상물과 퍼포먼스 공연 등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삶과 민주화 운동, 남북정상회담 등 통일운동 등을 집중조명했다.

부산본부 관계자는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한길을 걸어오신 김 전 대통령 서거는 국가적 손실이며 우리 국민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6·15공동선언 정신과 민주화 등 김 전 대통령이 남긴 소중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謹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몸바쳤던 당신,
평화를 사랑했던 당신의 유훈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SDL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하 수